

인권정보자료실  
CPb1.7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1차 학·술·회·의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은 정신계승을! 대통령은 개혁을!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조국과 민족을 너무나 사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였기에 조국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었고, 민중의 고통을 자신이 고통으로 받아 앉았습니다.  
겉국 단하나 남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통스런 죽음으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시련을 '열사'라 부릅니다.

■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국과 민족이 제단에 바치진 수많은 열사·희생자들은 이렇 한 번도 받지 못한 배후대간첩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서있건만 아직도 범죄자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인기부법,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 악법을 개혁하고 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시기 독재정권에 항거한 수많은 학생들, 민주 인사들은 인기부, 대공분실, 기무사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다가 자살이나 사고자로 위장된 채 살해당했습니다.

인기부, 대공분실, 기무사 등 폭압기관에 살해당한 의문의 죽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 국민은 정신계승을!  
대통령은 개혁을!  
국회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김대중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진정한 국민의 정부라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캠페인은 5월 한달 동안 매일 오후 11시부터 1시까지 서울역에서 진행되며, 6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서명운동과 '김대중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 운동'이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 : 1998년 5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 : 종로성당 (종묘공원 옆)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131-106 (우) 110-542 (전화) 742-3180 (FAX) 742-3181 (천리안) CHUSA (NOW) 열사정신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2동 651-30 (우) 110-542 (전화) 764-1684 (FAX) 743-2835

인권정보자료실

CPb1.7

# 차례

## 인사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이제 시작입니다. ... 2

## 사회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교수)

## 기조연설

민주 의열 투쟁의 역사적 위치와 명예회복의 문제 / 강만길 (고려대학교 교수) ... 4  
- 한국 현대사에서의 열사·희생자들의 지위와 역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원칙과 방향 -

## 발제

1. 한국현대사의 청산문제에 대하여 /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8  
- 반민특위부터 5·18 명예회복까지 과정에서의 문제점 -
2. 열사·희생자에 대한 구분과 각각에 대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안 /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15

## 토론

정성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국장)

배동인 (강원대학교 교수)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 첨부자료

1.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 24
2.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류 ... 26
3. 우리는 대국민캠페인을 왜 벌려나가야 하는가 ... 28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교양자료)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이제 시작입니다.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추모단체 연대회의 주관으로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 회의를 개최한지도 네 번째에 이릅니다. 회를 거듭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열사들의 아름다운 삶과 그 죽음이 이 나라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열사들이 민족민주운동 과정 중에 목숨을 바쳐야 했을 때 죽은 뒤에라도 자신을 위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열사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바로 살아남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사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지 지난 시기에 운명하신 열사 · 희생자 개인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열사들이 헌신하였던 운동, 즉 사건과 투쟁에 대한 명예회복이며 당시에 우리를 탄압했던 국가 권력이나 악덕 자본의 부도덕성, 그리고 관련 악법들의 부당성을 만 천하에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 나가야 할 민족민주 운동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24일부터 유가협과 공동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및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 국민 캠페인을 매일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결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한된 인원으로 아주 힘들게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고무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진실로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를 당하여 갈 곳 없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진 돈의 거의 다를 털어 음료수를 사서 공손하게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일이 몇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걸음을 되돌려 특별법 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열기가 오월의 태양보다도 더욱 뜨거웠습니다.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에 정성스레

글을 써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대통령도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과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이 김대중 정부의 정통성을 치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원칙적인 견지에서 풀려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민족민주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손쉬운 대상만 선택적으로 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가장 올바른 원칙을 견지하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가야 한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학술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기초 연설을 허락하여 주신 강만길 선생님, 사회를 맡아 주신 안병욱 선생님, 발제를 하여 주시는 김봉우 소장님, 한충목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배동인 선생님, 강정구 선생님, 민주노총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기 조 연 설

## 민주 의열 투쟁의 역사적 위치와 명예회복의 문제

· 한국 현대사에서의 ·  
· 열사· 희생자들의 지위와 역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원칙과 방향 ·

강만길  
고려대학교 교수

### 1. 민주 의열투쟁의 배경은 항일 의열투쟁

일제 강점시대의 민족해방운동 노선에는 이른바 실력양성운동이나 외교 독립론 등이 있었지만, 무력적 강압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무력투쟁 즉 독립전쟁 방법이었다.

그러나 해방구를 못 가진 완전 식민지 상태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할 공간을 국내에서 가지기 어려웠고, 이웃 중국지역을 해방구로 삼아 독립군을 양성했으나, 세계의 제국주의 강대국 대열에 선 일본의 군사력과 싸워 독립을 쟁취할만한 독립군을 양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독립전쟁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 독립전쟁적·무력투쟁적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투쟁방법이, 일제 강점 이전 안중근의 이등박문 저격 및 이완용 저격을 본 판 의열 투쟁이었다.

일제 강점 이전의 갑오농민전쟁 및 의병전쟁 방법을 계승한 것이 3·1운동 후의 청산리전투 및 봉오동 전투에서 보는 독립전쟁 방법이었다면, 안중근을 계승한 의열투쟁은 김원봉 중심의 의열단 투쟁 및 김구 중심의 한인애국단 투쟁 등이었다.

일제 강점 시대를 통해 윤봉길·이봉창·김지섭·김상옥·나석주 등의 활동으로 이어진 의열 투쟁은, 적의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강대한 반면 우리의 군사력 투쟁이 거의 불가능했던 일제 강점 시대 상황에서 민족적 정기를 유지하고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제 강점시대의 의열투쟁이 개인 차원의 투쟁이었다 하여 그 방법을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 효

과를 의심하는 경우도 없었다. 비록 개인 차원의 투쟁이라 해도 의열투쟁이 민족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

일제 강점시대 의열투쟁의 전사들이 해방 후의 역사적 보상을 기대하면서 목숨을 버린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해방 후의 민족사는 당연히 그들의 역사적 공적을 높이 평가했고, 일본 제국주의의 법률에 의해 살인범·과괴범·방화범 등으로 규정되었던 그들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그 후손들에 대해 일정한 물질적 보상도 곁들여졌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 2. 해방 후에도 의열투쟁이 계속된 이유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사회에 최초로 성립되는 정권은 대체로 민족해방운동 세력에게서 나오게 마련이며, 그러므로 정권의 정당성 및 정통성이 수립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군정을 거쳐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일제 강점시대와 반민족적 세력을 숙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됨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이 약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통성이 약한 정권은 곧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마련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도 억지로 유지되려 하는 경우 독재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 독재체제를 용납하지 않았다. 경찰의 공식발표만으로도 186명이 목숨을 바친 4·19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잘못 들어선 역사를 바로 세운 4·19 희생자들이 그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유공자로서 보상되며, 그 묘지가 국립 묘지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사회에 처음으로 성립된 정권이면서도 역사적 정통성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린 4·19는 독재세력과 반민족세력을 숙청하고 정권담당세력을 철저히 교체하는 혁명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4·19 주체세력이 정권을 수립하지 못하고, 역사 침입세력이 포함된 야당정권이 성립하므로써 4·19는 혁명이 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4·19주체 세력은 4·19가 혁명이 되게 하는 길을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데서 찾으려 했으나, 그것에 위협을 느낀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국주의 일본군 장교출신 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쿠데타 세력의 통치가 독재체제로 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여기에 저항하는 의열 활동이 다시 계속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유신' 체제로까지 이어진 박정희 정권 근 20년간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이 바쳐졌고, 그 결과가 10·26 사건으로 나타났다. 10·26사건을 치르고도 다시 군사독재정권이 후속되려 하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거대한 민중 저항으로서의 5·18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고, 진압군의 발표만으로도 14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희생을 치르고도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 등 두 차례의 군사정권이 계속되었지만, '광주사태'는 결

국 광주민주화운동 내지 광주민중항쟁으로 되어 그 올바른 역사적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 희생자들도 명예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30년간의 군사독재정권 기간을 통한 희생은 광주민중항쟁 희생자에 한정되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로 간 기간과 광주민중항쟁을 탄압하고 성립된 전두환 정권 기간, 그리고 그 후속 정권으로서의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혹은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혹은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여, 혹은 노태우 군사정권을 청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분신하거나 가혹한 고문에 희생되거나, 시위현장에서 최루탄 등에 맞아 희생되거나,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를 한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권 시대가 끝나고 민주적 정권이 성립되면서 4·19 희생자와 5·18 희생자들이 모두 그 명예가 회복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가 그 희생에 대해 일정하게 보상한 데 비해, 그 수가 3백명이 넘는 이들 민주열사들은 그들의 역사적 정당성이 공식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역사적 위치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 3. 국민정부와 의열투쟁 명예회복 문제

박정희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까지로 이어지는 30여년간의 군사독재시대에는 부·마항쟁과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1987년 6월항쟁과 같은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났으며, 이들 항쟁이 박정희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거나 전두환 정권의 성립을 저지하려 했거나, 또 그 연장 기도를 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 아래서 이들 대규모 민중저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들 대규모 민중저항이 일어나기까지는 수많은 개인 차원의 의열투쟁이 계속되었고, 이같은 개인차원의 의열투쟁이 계속 공백을 메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 개인 차원의 의열투쟁은 첫째 윤봉길·이봉창·나석주 등 일제 강점시대 개인 차원 항일열사들과 그 역사적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둘째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4·19 희생자나 군사독재정권의 재등장에 대항했던 5·18 희생자와도 그 역사적 역할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그들이 희생된 경위가 다를 뿐이다. 4·19 희생자나 5·18 희생자들은 시위와 '전투'의 현장에서 희생되었지만, 개인 차원의 민주열사들은 시위현장에서 희생된 경우도 있지만 혹은 고문실에서 희생되거나 희생된 장소가 분명치 않은 의문사의 경우도 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더 조사해야 하겠지만, 사인이 분명한 경우는 그 역사성이 4·19 희생자나 5·18 희생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일제 강점시대의 경우 가령 한국광복군과 같은 집단적 항일 투쟁에 가담한 공로자나 윤봉길·이봉창과 같은 개인 차원의 공로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에는 공적의 경중에 따르는 차별은 있을지언정, 집단적 저항과 개인 차원 항쟁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해방 후 민주열사의 경우도 4·19나 5·18과 같은 집단적 희생과 개인 차원의 희생 사이에 차별을 둔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이나 보상 사업은 당연히 민주적 정권일수록 더 적극성을 띄게 마련이다. 군사정권 이후의 민간정권으로서는 김영삼 문민정권에 이어 김대중 국민정권이 두 번째로 수립되었다.

그중 김영삼 정권은 군사정권과의 타협에 의해 성립된 정권이면서도 국민적 여망을 거부하지 못해서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우고, 군사정권의 집권자들을 일단 단죄하며 감옥으로 보내는 한편,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위상을 한층 더 바로 세웠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희생된 민주열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명예회복 문제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역사적·민주주의적 정통성이 강한 정권일수록 양심수 및 민주열사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기 마련이라 생각해보면, 양심수 정책이 거의 담보상태였고 개인차원 의열투쟁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없는 점은, 김영삼 문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서의 한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 역시 독자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었다. 5·16 세력 일부와의 연합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역사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지금은 이른바 외환대란 뒤처리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5·16 세력 일부와의 연합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짊어진 역사적 과제의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과 평화적 통일의 적극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 문제 속에는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김영삼 정권이 군사정권 집권자들을 사법처리하고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한 후에 성립된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이제 개인차원에서 활동한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사업, 그리고 양심수 석방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서 김영삼 정권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발 제 1

# 한국 현대사의 청산문제에 대하여

· 반민특위부터 5·18 명예회복까지 과정에서의 문제점 ·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글머리에

청산과 극복은 역사발전의 근본적 과제이다. 잘못된 흐름에 대한 청산과 극복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 전부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결국은 파탄에 빠지고 만다. 청산이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단절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직 계승과 상속만이 지상의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단절과 극복이야말로 역사발전의 기본 동력이다.

한국에서는 유난히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더 낮게 만들기 위하여 사는 것인데 왜 유난히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경구가 따라붙는다. 이 말은 과거의 잘못에 눈을 감고 그것을 고치거나 바로잡으려고 들지 말라는 뜻이다. 과거의 상황을 미래에까지 그대로 끌고 가려는 역사발전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경구가 세간에 유행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세력과 가치관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미래는 현재를 기반으로 뻗어가는 것이고 현재는 과거의 잘못이 그대로 쌓여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지난날의 역사와 단절하지 않으면 그 문제점이 그대로 앞날을 규정한다.

한국사회는 그 출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역사적 비리를 극복·청산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의 청산문제에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주어진 3차례의 역사청산 기회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부터 그 과정을 살피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 반민특위와 식민지유제 청산문제

한국은 1910년부터 일본의 무단적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은 1905년부터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점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식민지기로 잡는다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셈이다. 식민지배기간 일제는 조선의 자연자원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수탈하였으며 식민지 노예의식을 주입하고 고유문화를 파괴하였으며 앞잡이 집단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엄청난 폭압적 제도를 수립하였다. 극단적인 폭압과 간교한 식민정책 도 한 원인이 되어 조선은 자력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하고 강대국간의 세력쟁탈전에 얽혀서 독립되었다. 그러나 강대국에 얽혀서 얻어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조선을 두동강으로 만들고 새로운 강대국의 간섭과 지배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에서 당시 조선에 요구되었던 역사적 과제는 하루바삐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고 식민지 유제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이 두 과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굳이 선후를 따지자면 친일파의 청산이 가장 긴급한 과제였다. 왜냐하면 친일파는 지난날 민족의 원수요 모든 비극을 몰아온 장본인이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폭압기구를 장악하고 여전히 식민지 시절과 다름없는 폭압을 행사하는 주체였을 뿐 아니라 모든 조선의 재산을 장악한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 당한 괴어진 고통이 원인이 되어 해방 이후 일제 권력기관과 경찰, 관료들 비롯한 친일세력에 대한 처단 요구는 열화같이 들끓었으며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실행행사에 돌입하는 사태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에 대한 처벌요구는 해방직후부터 수많은 사회단체와 정당들의 화두가 되었다. 이런 요구가 일차적으로 집대성된 것이 미군정 과도입법원에서 의결된 '친일파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다. 입법의원은 그 구성상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음에도 이러한 법안이 가결된 것은 당시 친일파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법안은 미군정의 거부로 한 장의 휴지가 되고 말았다. 미군정의 핑계인즉 한국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미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 반민특위의 구성과 문제점

1945년 8월 15일 민족과 강토를 양단한 분단정부가 내외에 그 수립을 선포하였다. 38선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졌지만 분단정부는 어떤 형식이건 우리 민족이 개입하여 이를 민족내적인 경계선으로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분단정부가 들어설 당시의 정세는 내전으로 대단히 엄혹했음에도 정부수립 선포식을 끝내 자마자 친일파 청산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친일파 청산요구는 절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으로 볼 때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기에는 이미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다보니 친일파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규정, 처벌조항 모두가 본격적인 청산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느슨한 조항들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면피성 조항마저도 당시의 정세에선 제대로 집행될 수 없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인 반민특위는 대통령과 정부기관의 협공으로 공중분해되고 친일파 청산작업은 역사적 과제로 넘겨지고 말았다. 오히려 반민특위로 인하여 친일파들에게 법적 면제부만 주고 만 꼴이 되었다.

친일파 청산에 가장 좋았던 시기는 해방의 함성에 친일파들이 공포에 떨었던 8.15 직후가 적격이었으나 타력에 의한 해방이 알려주듯이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조직된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당시의 사회단체들은 대개 치열한 투쟁속에서 성장한 단체들이 아니라 해방의 함성 속에서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한자리 차지하려고 급조된 단체들이었다. 따라서 근거없는 기계론적 낙관에 사로잡혀 있었고 일의 순서를 제대로 잡지 못해 친일파 청산보다는 자파의 헤게모니 쟁탈에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이 단체들은 친일세력에게 일망타진 당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반민특위는 이미 친일파들이 국가적 장치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출발했고 당시 국회의원이거나 정부구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치열한 민족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특위를 지탱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나갈 도덕적 자격과 열의가 없는 인사들이 특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특위는 정부기구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민심을 조작하여 이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았다. 이미 불가능해진 사회정치적 조건에서 반민특위에다 친일파 미청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할지도 모른다.

어쨌건 당시 한국사회의 최대과제였던 친일파 청산에 완전히 실패함으로써 국가기구가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폭압장치로만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이로부터 민족분단의 고착화와 민주주의의 말살, 역대 반민족 폭압정권의 출현과 외세의존형 정치·경제구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 사월혁명과 독재유제의 청산문제

이승만정권은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력으로 정권을 창출해낸 것이 아니고 민족과 강토를 양단한 미국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외생적 정권이다.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적인 친일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친미파라 하더라도 결국은 식민지기의 특권적 지위덕분에 미국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던 인물들이 일시적인 미·일 갈등구조에 편승하여 지난날의 범죄를 면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친일파의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선 이승만이 저지른 범죄는 실로 엄청나다. 민족분단과 동족살상을 초래·추진한 죄,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족경제를 파탄시킨 죄, 무엇보다 식민지배기의 폭압적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반민족적 이념과 세력을 번성케 한 죄를 비롯하여 수도 셀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부정부패는 그에 비하면 가벼운 경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이승만은 결국 지나친 권력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국 최초이자 유일

한 민중봉기의 희생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자유당 시절 한국사회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과는 달리 사회적인 조직활동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다. 때문에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학생들이었다. 야당이 있었지만 권력으로부터의 소외감 때문에 오는 불만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차이가 없었다. 이승만이 쫓겨난 후 권력을 계승한 것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권이었으며 그 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인계받은 집단은 이승만정권 후반기 야당으로 변신한 장면, 윤보선의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승만정권의 구성원으로서 충성을 바치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기 친일행적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인사들이다.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일전력자의 구성이 이승만시절보다 오히려 늘어난 사실이 알려주듯이 이승만 시절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요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지주이며 실질적인 주인공을 하던 미국이 정권교체의 혼란을 막고 정권의 내용적 계승을 보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조건들이 4월혁명의 본질을 외면하고 4월혁명을 불러온 범죄집단인 자유당이 혁명정국의 개정헌법과 법률을 심의하고 다시 선거에 나서 유권자의 심판을 묻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의 두목인 이승만을 미국으로 빼들려서 역사적 심판으로부터 면제시켜 세월이 흐른 후 이승만 되살리기 사업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을 조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4월혁명 덕분에 정권을 잡았으나 이승만정권기의 총체적 범죄는 물론이고 4월혁명을 불러온 직접적 범죄조차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60년 10월 11일 4월혁명 부상학생들을 필두로 한 1만여명의 학생들이 '장면정권 타도'를 외치며 혁명입법을 지연시키는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 한 이후에야 마지못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재 처리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시대에 일어난 엄청난 범죄들이 모두 면책되고 오직 3.15부정선거만이 겨우 심판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나 그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몫으로 넘어가 희극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4월혁명이 한국 초유의 혁명적 상황을 연출하고서도 실패로 끝난 것은 4월혁명 정신을 실현할 조직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을 물려받은 민주당정권이 친일파들이면서 동시에 이승만정권의 한 축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4월혁명의 정신을 구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친일세력인 박정희 일당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과거로 회귀해버렸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승만정권이 넘어갔을 바로 그 시점에 상황을 주도할 집단이 나서서 심판을 추진했다더라면 최소한 3.15부정선거 관련사항만이라도 어느 정도 청산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의 한국사도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물론 이것은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건 4월혁명이 외견상 성공한 혁명이면서도 역사적 범죄청산에 실패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은 그후에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한국사회를 이어가게 되었으니 그 본질적 내용인즉 식민주의의 지속이다.

### 광주민중항쟁과 전두환, 노태우 처벌

광주항쟁은 지금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동시대적 사건이고, 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므로 항쟁의 흐름과 의미는 생략한다. 다만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광주항쟁의 위대성은 비폭력에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광주항쟁의 위대성은 4.19이후 내내 단순한 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저항문화를 일신하여 총에는 총으로 무장하고 대응하여 군대를 몰아내고 자치·자경을 일시적으로나마 이룩한 데 있다. 광주가 총으로 무장하고 최후까지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런 행사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식민지시기부터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아릇한 단어가 체제언론의 비호하에 난무해 왔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저항을 포기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위장하려는 분들의 말이거나 아니면 거센 저항을 두려워 한 체제측이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퍼뜨린 말에 지나지 않는다. 저명인사의 경우 간혹 비폭력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는데 이것은 폭력을 행사할 많은 일반인들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광주는 박정희정권 20년 지배가 몰아온 크나큰 폐해에 대항해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본원적인 모순에도 저항한 것이다.

광주항쟁은 오랫동안 공개적인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다가 88년 가을 국회에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청문회장이 TV에 생중계되면서 비로소 심판대에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폭도나 반란이 아니라 오히려 신군부측이 반란주범이요 폭도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문회는 광주학살의 기술적 측면에만 국한된 채 그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반란주범의 처벌은 꿈도 꾸지 못하고 말았다. 김영삼정권에 들어서도 광주항쟁은 별다른 해결의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학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사회의 항의가 거세지고 5·6공세력과 김영삼세력과의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법조계의 새로운 법해석이 나오는 등 여건의 변화가 커지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선 역사적 행위의 청산처럼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대단히 축소해석되어 광주 현장대립에 국한되어 버렸고 처벌도 그 선에 한정되고 말았다. 한미관계의 문제점과 박정희통치기의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신군부측의 전반적 만행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고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광주항쟁이 지역문제로 왜곡된 채 상당한 세월이 흘러 청산에 어려운 조건이 형성된 점 외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찰을 비롯한 집권당, 기타 범죄의 공범자 또는 가해 기득권층이 처벌의 주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다음으로 항쟁이후부터 처벌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항쟁의 올바른 뜻을 계승할 제대로 된 정치지도세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 끝내면서

처음부터 타율적으로 잘못 출발한 한국 현대사는 계승의 역사만 있고 단절과 극복의 역사는 없었다. 이렇게 계승의 역사만 이어지고 피흘리며 이룩한 항쟁의 성과들이 단순한 정치이용물로 전락하고 만 것은 가해자 범죄 집단이 심판자요 처벌의 주역으로 늘 등장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청산이란 항쟁의 주역이 청산의 주역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절대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던 역대 대통령들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쫓겨나거나 총맞아 죽거나 교도소에 간 전례가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간판만 바뀐 채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같은 실패가 계속되는 이유는 인식체계와 사회제도 문제를 개인의 권력행사 문제로 착각한 인식수준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주인이자 중심축인 외세 문제에 어두웠던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의 근본적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고 제대로 된 청산을 이룰 수 있는 정치역량을 갖지 못한 것도 그리고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연구자들이 구조분석에 머무르고 말다보니 청산을 환경의 자연적 성숙의 결과물 정도로 인식하고만 실천인식이 결핍된 탓도 있을 것이다.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대응에만 골몰한 탓에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청산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무시해온 것도 아마 하나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또 하나 오랜 기간 강대국의 문화적 영향하에 있었고 전투적 해방운동이 부재했던 탓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처단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이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폭력적 응징을 좌약시하도록 길들여져 온 식민지 노예의식의 미청산에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고 철저히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과거가 재생하고 되풀이되며 따라서 발전이나 미래는 없다는 점이다.

### 덧붙이는 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문제에 매달려 있으며 반미운동이 열을 뽐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땅에서 미군이 습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았던 일은 없다. 덕분에 그 열렬했던 운동은 없었던 일처럼 되고 말았다. 한국은 배타적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언론에서 항상 대서특필하지만 식민지배를 당한 원수 지간임에도 독도문제가, 일본어선 문제가, 망언문제가 아무리 긴장을 초래해도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땅에서 구타나 폭언 한번 당한 일이 없는 참으로 양순한 순종형 지역이라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몇 년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북한핵 문제가 보도되었을 때 한복을 입고 다니던 교포 여학생 약 150여명이 일본 청년들에게 길거리에서 칼로 옷이 찢기는 만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중동이건 구라과 어디건 자국민이 모욕을 받으면 즉각 폭탄으로 응징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이른바 선진국 언론이 총출동하여 온갖 야비한 언사로



비난의 공세를 펼치지만 결국은 이러한 단호한 응징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은 역사의 교훈이다. 한국은 의열단의 몇몇 사례를 빼면 식민지시기에도 국내에서 일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일이 거의 없는 안전한 지대였다. 항일운동은 성명서 배포나 민세운동 차원의 점잖은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더 나아가 보아도 파업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가해자의 엄청난 폭력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형태로서는 역사의 교훈이 서기 어렵다. 또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역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응징이 분명하게 행하여질 때, 그런 문화가 널리 퍼져 청산과 교훈을 제대로 살리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의 호칭상의 구분과 각각에 대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향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1. 들어가는 말

우리 민족의 역사는 외세와 독재, 그리고 자본과의 투쟁의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애국 인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산화하였다.

60년대 이래 지금까지 4·19, 5·18열사를 제외하고 331분이 산화하였다. 이 분들의 삶은 개인의 이익을 구하여 살아온 삶이 아니라 동료와 조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살아온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든 숭고한 죽음이었다.

우리는 이분들을 통칭하여 열사·희생자로 불렀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기관지 '열사회보'에는 일괄하여 동지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민족민주운동 내에서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산화하신 이후에도 아직까지 과거 독재 정권이 씌워 놓은 범법자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국가에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 때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호칭상의 구분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통칭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로 통칭되어 온 호칭에 대한 구분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명예회복 방향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 글을 작성하며 어려웠던 점은 현대사에서의 의·열사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기초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발제자 본인이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서 관련 지식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글은 민족민주운동을 하고 있는 당시지의 한 사람으로써 제 운동 세력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호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2. 호칭에 대한 구분을 제안하며

### 1) 해방 전 의·열사에 대한 호칭

선조들은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의·열사들의 투쟁은 일제에게는 테러라 폄하되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었고 탄압받고 있는 국민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열사, 장인환 의사, 전명운 의사, 안중근 의사 등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의·열사들 중에 몇 분이다. 이 분들의 죽음의 형태는 자결과 옥사, 그리고 일제에 의해 사형된 경우도 있다. 이것으로 보면 열사와 의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죽음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국어사전에 나타난 각각의 호칭이 갖는 의미

의·열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열사의 의미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는 최현대에서의 열사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사 (烈士) :**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절의(節義)를 굳게 지키며 싸운 사람.

**의사 (義士) :** 의로운 뜻이 있는 지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애국 열사.

**지사 (志士) :** 기개가 높고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여 제 몸을 희생해서 일하려는 포부가 큰 사람.

**투사 (鬪士) :** 사회 운동 등에서 정의를 위해 활약 투쟁하는 사람.

### 3)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호칭 구분 제안

해방 이후 열사라는 호칭이 통용된 된 계기는 4·19열사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청계천에서 한 노동자가 분신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 운동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내었고 열사의 호칭이 사회 저변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에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권과 문민독재라하는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한 항거인 분신, 할복 등의 투쟁이 있따

르면서 열사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면서 위 1에서와 같이 호칭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열사·희생자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두고 호칭상의 구분을 하고자 한다.

### 열사 (烈士)

- ① 개인의 문제로 비관하여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동료와 조직, 나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분신, 투신, 할복 등의 방식으로 산화한 경우.
- ② 민족민주 운동 과정에서 독재와 자본 등에 의해 살해된 것이 명백한 경우.
- ③ 투쟁 과정 중에 운명한 경우.

### 지사 (志士)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한 평생 운동에 매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분이 병이나 사고로 운명한 경우. (지사와 투사의 구분은 민족민주운동에 매진한 기간, 공적, 역할,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투사 (鬪士)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운명할 때까지 운동에 매진하다가 젊은 나이에 운명한 경우.

### 의사 (疑士)

운동 과정 중에 안기부, 대공분실, 기무사 등 독재정권의 폭압기관이나 자본에 의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 병사로 은폐되어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로 지금까지 의문의 죽음 또는 의문사로 불려졌으나 이는 호칭으로 적합하지 않았음. 이 경우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후 위의 구분에 따라 재구분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

## 3. 구분에 따른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향

### 1) 현행 국가보훈법령 체계

#### 법률

가.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나.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 라. 보훈기금법
- 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 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 자. 군인보험법

**대통령령**

- 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 나.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 다.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마. 보훈기금법시행령
- 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 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아. 군인보험법시행령
- 자. 국가유공자기장령
- 차. 국립4.19묘지규정

**총리령**

- 가.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나.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라.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마.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 바. 국립4.19묘지시행규칙

이 중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과 연관이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 이념, 국가의 시책, 대상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第1條(目的) 이 법은 日帝로부터 祖國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공헌한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應분의 禮遇를 함으로써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고 나아가 國民의 愛國精神을 함양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禮遇의 基本理念)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한 우리 大韓民國은 獨立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송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榮譽로운 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第3條(國家의 施策) 國家는 獨立有功者의 愛國精神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民族正氣를 宣揚하며, 第2條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한다.

第4條(適用對象者) 다음 各號의 1의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이 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1. 殉國先烈 :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 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殉國한 者로서 그 功勞로 建國勳章을 받은 者

2. 愛國志士 :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 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者로서 그 功勞로 建國勳章을 받은 者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應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 3.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5.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 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11.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 2)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향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향은 크게 보아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 째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목숨을 바쳐가며 이루고자 했던 염원들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실현하는 일로써 명예회복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방향이다.

둘 째는 지난 시기에 외세와 독재정권, 그리고 악덕 자본가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씨워 놓은 범법자의 굴레를 벗겨 내고 국민들에게 송양 받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이 투쟁 과정 중에 관련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정당한 역사의 평가를 이루어내는 것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에게 저촉시킨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의 악법 개폐,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였던 독재 정권의 폭압기구인 안기부, 대공분실, 기무사의 해체와 국민을 위한 국가기구로 재편하는 일이다.

셋 째는 독재 정권의 폭압기구와 악덕 자본가들에 의해서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된 의문의 죽음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루어 내는 일이다.

넷 째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의 숭고한 삶과 죽음을 길이 후손에게 전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을 전개하는 일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련 악법들이 개폐되어야 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남아공이나 남미의 여러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진실과 화해 위원회'이거나 '왜곡된 역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과 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고려된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이 운명하신 때는 길게는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경우 현행 법상으로 공소 시효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심판과 진상 규명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류에 반한 죄'나 UN이 제정한 '인도에 관한 죄'처럼 공소 시효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기 진상 규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수사권의 문제이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을 살해한 그 당사자들에게 수사권을 맡기게 되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 놓는 격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위상은 안기부, 대공분실, 기무사, 검찰,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완전 해결될 때까지 아무도 해산할 수 없도록 특별위원회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특별위원회의 조사작업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은 물론 독재정권 아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과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관할 부서와 유가족 대표와 시민사회단체대표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3) 호칭상의 구분에 따른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향

특별법과 특별위원회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 현행 국가보훈 법령을 참고로 하여 '민족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에 따른 구체화이다.

위의 1)에서 보듯이 현행 보훈법령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이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지라도 역대 독재정권과 항거를 하는 과정에 온몸을 던져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산화하신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이에 근거한 예우는 마땅한 일이다. 현행보훈법률 체계 내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과거 정권과는 일정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 오히려 현행 보훈법령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률인 '민족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의 구분처럼 호칭상의 구분에 따라 예우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4)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가족과 추모단체연대회의 대표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이러한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위원회 설치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유족,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독재정권이 지행한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 '민족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다. 그리고 이는 50년만의 정권교체가 갖는 올바른 의미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동력이 형성될 것이다.

## 첨부자료

### 첨부자료 1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 첨부자료 2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류

### 첨부자료 3

우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왜 벌려나가야 하는가.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교양자료)

#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1998. 5. 22 현재

		노동자	학 생	농 민	빈 민	시 민	재 야	장 기 수	군 경	합 계
박 정 혁 정 권	1960 년대							조봉암 최백근 조용수 최근우 정순중 박재복 권재혁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정태목 손순남 윤성만 이상섭 최종천 최한우 하상혁 황대현		18
	1970	전태일						권오금		2
	1971	김진수						김대석		2
	1972							고봉을 이연승 한태갑 한현수		4
	1973						최종길	김영환 김태신 김영호 조인국		5
	1974							김태원 박운업 배학수 윤종하 이동근 현영원		6
	1975		김상진				장준하	김용원 도여종 서도원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우홍신 장석구 기세일 신춘복 하야청		14
	1976							공재용 김규호 김용철 정영훈		4
	1977							김경익 김규호 김용철 정영훈		4
	1978		정범영					박정래 이훈동 탁해섭		4
1979	김경숙						손순영 송순희 임창규		4	
소 계	3	2				2	60		67	
전 두 환 정 권	1980	김종태	김의기				임기운	김규창 김승운 김용선 변형만 노천도		8
	1981		김태훈 최종철					이재문 최점수		4
	1982					문영수		신항식	정성희	3
	1983		황정하					신창길	이운성 김두환 한영현 최문순 한희철	7
	1984	박종만							허원근	2
	1985	홍기일	기 학 우종원 송광영					이용문 황필규		6
	1986	박영진 변형진 신호수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해정 이경환 김성수 진성일	오한섭		김상원	강상철	전재권 강동창		15
	1987	이순덕 황보영국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이석규 이석규 김수배 김성애 박용수	박종철 표정두 박선영 이재용 이한열 박태영			이태춘	채광석	문갑수 이선우 최재필 최주백	장재만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구 정연관	32
	소 계	17	20	1		3	3	17	16	77

		노동자	학 생	농 민	빈 민	시 민	재 야	장 기 수	군 경	합 계	
노 태 우 정 권	1988	이대건 정경식 김장수 오범근 최운범 장용훈 문용섭 문승연 성원희 송철순 이문철 배중순	유병진 광현정 조성만 최덕수 박래진	김길호				고정희 정성규 신영일	유진근 공인두 박창술 윤기남	박종근 우인수 양영진	28
	1989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이상남 조장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상조 강현중 김중하 이재호	남태현 이철규 이내창		장상물 이재식	김병규	함석현	이상물 조용순		21	
	1990	배주영 강민호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태조 오원석	김용갑 신장호 정성목 김수경 심광보 김기훈 최용현		이원기		조영래 김병근	정대철 김병민	박성문	21	
	1991	김동환 신용길 박창수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유재관 김치철 권미경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귀정 김철수 고재욱 류정하 문승필			이정순 정상순	김기설 김영환 양용찬	양재영 김광길 최인정	송중호 남현진 손석용	29	
	1992	임희진 박복실 최성근 이광웅 윤재영	이상렬 박한민		김선호		최성목 오원진	박관수 김대봉 이태영		13	
	합 계	46	26	1	4	3	11	14	7	112	
	김 영 삼 정 권	1993	정문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서영호 김주리 임혜란 최 용	이경동 한상용	김영지				황인철 성순희	이래선 현승중 권두영	19
1994		김성문 김상욱 최성목 김낙성 임종호	이창환 신건수	김순복 손구용			김남주 문익환 이오순 이범영	김광삼		14	
1995		양봉수 박삼훈 서천근 조수원	장현구		최정환 이덕인		박현채	정종서 강철순	오원택	11	
1996		김시자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박문근	노수석 진철원 권희정 황해인 오영권 박동학		신연숙		김말룡	김도한 문한영		15	
1997		홍장길	한상근 류재물 김준배 이형관	최종진	민병일 박순덕			권양섭 진태문		10	
소 계	26	15	4	5		8	10	1	69		
1998	최대림 최영아									2	
년도 미 상								권창수 권홍직 변치수 정순직		4	
합 계	94	63	6	9	6	24	105	24	331		

#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의 산화형태 분류

<장기수 선생님들의 운명과정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이 자료에서는 제외합니다.>

1998. 5. 22 현재

		분신	할복	투신	타살	음독	목매	의문의 죽음	병사	사고사
박정희정권	1960년대									
	1970	전태일								
	1971				김진수					
	1972									
	1973							최종길		
	1974									
	1975		김상진					장준하		
	1976									
	1977									
	1978								정범영	
1979			김경숙							
소계	1	1	1	1				3		
전두환정권	1980	김종태		김익기				임기운		
	1981			김태훈					최종철	
	1982							문영수 정성희		
	1983							이운성 김두황 한영현 최문순 한희철		
	1984	박종만						허원근		
	1985	홍기일 송광영				기혁 (사인불명)		우종원		
	1986	박영진 변형진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전성일 강상철		박해정 이경환	김상원	오한섭		신호수 김성수		
	1987	표정두 황보영국 이석규 김수배 박응수 박태영		김성애	박종철 이한열 이석규		박선영 장재완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규 정연관 이태춘	이순덕	채광석 이재용 김현욱 유인식 이대용 박용선
	소계	17		6	4	2	2	21	2	6

		분신	할복	투신	타살	음독	목매	의문의 죽음	병사	사고사
노태우정권	1988	이대건 김장수 최문범 장용훈 성완희 이문철 최덕수 박래진	조성만	양영진	김길호			정경식 오범근 문용섭 배중순 유인수 박종근 고정희	문송면 유병진 신영일 관현정	송철순 정성규
	1989	최한용 김문기 김종수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강현중 김종하 남태현 이지식		김병구	이상남 최성조 정상울			이재호 이철규 이내창	함석현	조정식
	1990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태조 심광보		김수경 최유현		정성목	이원기	김용갑 박성은	오원석 김기훈 조영래 김병근	배주영 강민호 신장호
	1991	문용하 이진희 석광수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철수 이정순 정상순 손석용 김기철 양용찬		권미경	강경대 김귀정			박창수 송중호 남현진 문승필 김영환	김봉환 신용길	유재관 김치철 고재욱 류정하
	1992				김선호				임희진 박복실 이상렬 박현민 이광웅 최성근 최성목 오원진 윤재영	
	소계	36	1	5	7	1	1	17	20	10
	1993	이경동 한상용							황인철 성순희 김영자 정문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임혜란	서영호 김주리 최 응
김영삼정권	1994	최성목				김성운	임종호		김상욱 김낙성 김남주 문익환 이오순 이범영	이창환 신건수 김순목 손우용
	1995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장원구 최정환					조수원	이덕인	박헌채	오원택
	1996	김시자 진철원 황해인 오영권 박동학			신연숙 노수석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권희정 김달룡	박문근
	1997	한상근			류재울 김준배 민병일 박순덕		홍장길			이형관 최종진
	소계	14			6	2	2	1	25	9
	1998	최대림								최명아
합계	69	2	12	18	5	5	42	48	25	

# 우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왜 벌려나가야 하는가.

-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교양자료 -

## I. 들어가며

50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자칭하여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정권의 초기보다도 여러면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김대중 정권에 거는 기대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울러 지난 시기의 부도덕한 정권에서 자행된 온갖 악습과 구태를 타파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될 일이며 동시에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두 가지 문제 모두가 순탄하게 풀려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혁을 이뤄 내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이유는 김대중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의 상당수가 반 개혁적인 인물들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개혁의 원칙이나 방향, 그리고 대상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도 없이 정부 차원에서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은폐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을 유지 시켜왔던 제도와 정책, 구성인자들에 대한 단절과, 지난 시기 그들에 의해 자행된 범죄를 심판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권의 개혁 방향은 지난 시기에 왜곡되어진 역사를 바로 잡아

야하는 것이며 민중들에게 부당하게 행사한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등 악법들의 개폐와 안기부, 기무사, 대공분실 등 폭압기관들을 철폐하여 국가 공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의장 이창복)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정권 시기에 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에 의해 국가 안위의 차원이 아닌 독재 정권의 안위를 위해 민주 인사들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악법을 철폐하는 투쟁과 안기부, 대공분실, 기무사 등 폭압기관을 해체하는 투쟁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60년대이래 조국과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였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바쳤다. 이렇게 산화하신 열사희생자들이 331분에 이르지만 이 분들은 아직까지 당시에 낙인찍힌 범법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 투쟁은 한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닫으며 절망

에 빠진 민중들을 전체를 생각하고 단결하도록 하여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투쟁이며, 지난 시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다시는 그와 같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이 투쟁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화하려 한다. 그 이유는 의문의 죽음과 열사희생자 전체를 포괄하는 특별법의 제정 없이 진상 규명이나 명예회복이 될 경우에는 김대중 정권이 손쉬운 대상만을 취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치장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의문의 죽음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이루어 내어 이 안에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년차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열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특별법 또한 올바른 원칙에 의해 제정되고 이후에도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일과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집요하게 해결 될 때까지 추진하려 한다. 우리는 1단계 투쟁으로 5월말까지 매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2단계, 3단계 투쟁으로 기필코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 낼 것이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이다. 나라의 민주화와 자주화, 통일을 위해 산화하신 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루는 일은 열사들이 이루고자 한 염원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갖은 난관이 가로막아도 역사는 정방향으로 전진한다. 그리고 이 길은 독재자와 위선자, 무조건 착취하려는 악덕 자본가들이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이 땅의 참민중들이 승리하는 길이다.

## II.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우리 민중의 역사에서 핵을 이루었다.

민중의 역사는 외세와 독재, 그리고 자본의 역사인 분열과 억압, 착취에 반대하는 자주와 단결, 통일의 역사이며, 인간 해방의 역사이고 평등의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은 외세와 독재와 자본에 항거하여 끊임 없이 투쟁해왔다. 이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는 이땅의 백두대간처럼 장

대한 골격을 이루어 조국과 민족을 지탱해 왔으며 자주민주통일의 세상, 인간 해방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투쟁은 격랑을 만난 급류처럼 질풍노도와 같이 달리기도 하며, 때로는 절벽을 만나 에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는 대하처럼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이러한 민중의 역사 속에서 장렬히 산화하였다. 1998년 현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60년대 이후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는 모두 331분)에 이른다. 이 분들 중에는 4·19 열사나 5·18 열사와 같이 특정시기에 집단적으로 살해되신 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분들이 죽음을 맞이한 방식은 분신, 투신, 할복, 음독, 고문, 사고, 폭행, 총상, 익사, 병, 교수형 등으로 각기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운동에 헌신하였다는 점이다.

민중의 아들 딸들인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이 순결하고 장대한 민중의 투쟁에 최 정점에 서 계셨다. 백두대간의 우뚝 선 봉우리와 같이 민중들의 삶에 지표가 되기도 하였으며 칠효같은 어둔 밤에 풍랑을 만난 배들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기도 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갈갈이 찢어놓는 온갖 압제와 폭력에 맞서 싸우는 접점에 서 있었으며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 악법과 제도에 온 몸으로 맞서 항거하였다.

다시말해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의 일로 비관, 절망하

1) 이 집계는 국가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조사한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계 누락되어 있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된 의문의 죽음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폭압적인 그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그들이 주장하는 사인을 받아들이고 화장해 버린 경우가 많았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  
2) 4·19 열사나 5·18 열사의 경우 특정 시기에 집단적으로 산화하셨기 때문에 관련 추모 단체가 여러 개 조직되어 있고 그 규모도 큰 편으로서 독자적인 추모(기념) 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일정 부분 명예회복도 이루어 졌다. 반면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경우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산화하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산화하신 경우가 많으며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시대를 관통하여 민족민주운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갖고 산화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 및 기념 사업과 진상 규명 등 명예회복 사업의 동질성 등에 의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에서는 4·19 열사와 5·18 열사 외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지도 않았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진실로 영원한 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 민중의 운명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무엇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일까.

열사 정신의 정수는 사랑이다.

많은 운동가들이 투쟁을 하고 있다. 집회를 하기도 하며 시위도 한다. 때로는 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불과 하다. 투쟁을 하기 이전에 개개인들은 변화된다. 구성원들의 아픔을 곧 나의 아픔으로 느낄 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다. 함께 그 아픔을 극복해 나갈 동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지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단 할 때부터 이미 사랑은 시작된 것이다. 운동가의 동료들에 대한 동지애도 본질에 있어서 남녀간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욱 범위가 컸기 때문에 숭고한 사랑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그 범위가 조합이나 학교 등의 작은 단위를 넘어 계층이나 민족, 조국으로 확대되어 민중에, 민족에, 조국에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조국과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 조국과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상에 맞서 투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깃든 투쟁은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까지 하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투쟁은 메마르고 건조해지며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당사자들에게조차 공감을 얻기 힘들어 지는 것이다.

열사 정신의 정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계급성', '투쟁성', '용기', '신념', '희생정신' 등을 말하곤 한다. 이 각각의 단어들 이 가리키는 의미가 대단히 훌륭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본질에 사랑이 있기에 이러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열사 정신은 민중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 바로 이것이 열사 정신이다. 열사 정신에는 나를 앞세우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형태는 없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 여기에서 민중들에 대한 헌신성이 나타난다. 자기 몸을 불태워 세상을 밝히는 햇불과도 같은 것이다.

### III.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비롯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 투쟁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중의 역사를 갖추 세우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라 한다. 수많은 열사들이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그 제단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하지만 열사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태우려고 결단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민이 있었겠는가. 진실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곤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옥상에서 몸을 날리는 순간에도 열사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했으며 절규하였다.

#### 1.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하여 정리해고의 시대에 열사 정신으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이 땅에서 민중들이 처한 삶의 고단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 처참함이 극으로 치달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유령처럼 거리를 떠돌고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은 방치되어 가고 있으며 일가족 동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동지가 아닌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되면서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조직과 집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기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패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이다. 정리해고 1순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하고 노동조합에 힘을 실지도 않는다. 동료들의 해고를 동조하고 묵인하며 심지어 거들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인격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주의 손에 쥐어진 칼자루를 통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어지게 되고 그저 목을 내어놓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다. 악순환이다. 정리해고 당하고 나서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다시 되

돌리기에 너무나 힘든 투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모두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할 때부터 예정되어 진 것이다. 동료의 목을 자르는 해고의 칼날을 묵인할 때부터 그 칼날은 다시 내 목을 향해 돌아오게 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용도 폐기된 후 버려지는 기계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인 우울증에 걸려 가고 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정서적으로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가치관의 붕괴와 자기 상실감, 동료들에 대한 죄의식과 배신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그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투쟁을 통해 쌓아 놓은 기존의 질서들이 무너지면서 한 줄기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 사회에 희망의 봄 빛 대신 절망의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절망의 상태에서 민중들은 신세 한탄이나 하고 한숨만 푹푹 쉬며 끝난데 없이 가다가 자살로서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개인보다 전체를 사랑한 열사들의 정신을 받아 안고 투쟁하는 것이다.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독재정권과 악질 자본가 외에는 이 땅에 단 한사람도 없다.

#### 2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과 우리 운동의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고 과거 정권의 심판과 악법 철폐, 폭압기구 해체를 이루고자 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려다 독재 정권과 자본에 죽음으로 항거하신 열사들은 산화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해 범법자로 낙인찍혀 있다.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는 투쟁과 안기부, 대공본실, 기무사 등에 의해 살해당하고 은폐된, 의문의 죽음을 진상 규명하는 투쟁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닌 독재 정권과 재벌들의 안위를 위했던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 악법을 개폐하는 투쟁과 안기부, 대공본실, 기무사 등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투쟁과 직결 된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심판하고 그들에 의해 범죄시 된 민족민주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억압과 착취의 세상을 해방 세상으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을 밝혀 내고, 사상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공무집행방해법 등 각종 악법 개폐와 안기부, 보안사, 대공본실 등 폭압기구 해체 투쟁을 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외세와 독재정권, 그리고 자본가들의 안위를 위해 민중들이 탄압받고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처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비롯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는 투쟁은 열사들이 죽음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것,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비롯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 투쟁은 단순히 국가 배상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 투쟁에서의 핵심적인 요체는 폭압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참 인간의 전형인 열사희생자들의 삶을 받아 안게하여 스스로가 아름다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민중의 요구가 될 수 있으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강위력한 투쟁이 될 수 있다.

#### 3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특히 타인에 의해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물고문, 전기고문, 집단 폭행을 당하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고 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겠는가. 그 때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조직 그리고 동지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은 가해자와 사인이 은폐된채 단순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으로 살아 남은 우리에게 돌아 왔다.

세상의 모든 죽음들 치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지만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가장 원통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권에 의해 살해 된 뒤 그 진상이 은

폐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에서 집결한 바로는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42분에 이른다.

1) 의문의 죽음 유형

첫 번째 유형으로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등에서 자행한 것이 확실시되는 정치적 타살이 12분이다. 그리고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에 자행된 애국인사들에 대한 암살과, 박정희 정권 때 수많은 장기수선생님들이 사상 전향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살해되었으나 단순 옥사로 처리된 것들이 다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운동을 했다 하여 징집 영장도 없이 강제로 군대로 끌려가 보안사에서 사상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요구하는 '녹화사업'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6분이 자살로 위장되어 살해되었다. 공식적인 녹화사업 폐지 이후에도 보안사의 이와 같은 공작 의해서 5분이 또다시 살해되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조합활동과 시위 등으로 공권력과 자본에 의해 8분이 살해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운동 과정과 특별한 연관을 갖지는 않았지만 불의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로 애국 시민이 2분, 애국 군인이 9분에 달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전체 의문의 죽음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문의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독재 정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살해자의 철저한 은폐와 강압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경우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하였으며 비판 자살, 또는 단순 사고로 조작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2)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지배 권력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해 왔다. 이는 섬멸적인 제국주의 양태와 폭압적인 군사 독재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국가 권력자와 자본가를 가리지 않고 그 체제가 강요하는 억압을 부정하는 집단과 개인에게 자행하여 왔다. 이러한 양태는 일제시대 때부터 자행되어 온 치안유지법과 같은 사상 전향 행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

어져 오고 있음에 기인한다. 여기에 해방 이후 미군정이 자행한 고문 기술이 더 보태졌고 이후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그 형태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정치적 의문의 죽음이 진상 규명되지 않은 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묻혀 버렸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3) 70년대 이후 대표적 정치적 의문의 죽음과 쟁점

1.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1) 배경 ;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1973년 10월 16일 오후 2시, 당시 중앙정보부(현 안기부)에서 수사중이던 동백림사건에 수사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진출두. 그후 중앙정보부는 용변 중 7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73년 10월 19일 새벽 1시 30분 자살했다고 발표. 유가족들에게 강압하여 서둘러 장례를 치르게 함.

2) 쟁점들

- ① 최교수의 죽음 이후 중앙정보부가 유가족에게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고 했다가 "평양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로 둔갑했다가 공식 발표문에서는 "국내 조직을 대라고 하자 이에 불응 투신자살" 등으로 번복하였다는 점.
- ② 유가족에게 투신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후 동생이 사건 현장을 몰래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는 혈흔이나 혈흔을 지운 물자국도 없었던 점.
- ③ 사체 부검에 최교수측 변호인과 의료진의 입회를 중앙정보부가 완강히 거부하였다는 점.
- ④ 조사과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관과 6m거리를 둔 상태에서 변기를 넘어 창틀에 올라 투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시 창문은 잠겨 있었던 점.
- ⑤ 유가족들에게 장송록 수사단장이 얼떨결에 고문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던 점.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은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점.
- ⑥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가 죽은 뒤 유가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한 점.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73년 10월 25일자 신문에 '유

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적발'을 발표하면서 최교수에 대한 죄상을 열거,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게 하였다.

2. 장준하 선생

1) 배경 :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정적이었다. 소위 재야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신망을 얻었던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쿠데타 집권 직후부터 즐기치게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선봉에 섰으며, 73년 12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서명자가 10일만에 30여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박정희와의 투쟁이 절정에 이루었는데 긴급조치 선포 1주일 만인 74년 1월 긴급조치 첫 위반자로 구속, 군법회의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중이던 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 등산 중에 의문투성이의 사고로 죽게 된다.

2) 쟁점들 : 당시 당국은 약사봉에서 등산 중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아래와 같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 ①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직경 2cm, 중앙부에 흠이 있는 인공적인 물체를 가지고 직각으로 가격하여 생긴 후 두부 함몰상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오른쪽 팔과 엉덩이의 의문의 주사자국은 보통 주사자국보다 크게 확장된 것으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주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마취 주사후 몸을 고정시킨 뒤 후두부 급소부위를 강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의들의 소견.
- ② 약 75m 높이의 암벽에서 떨어졌음에도 아무런 상처도 없이 반듯이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추락사라 보기 어려운 점.
- ③ 유일한 사고 목격자인 김용환씨의 증언이 현장 상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점-사건현장은 모난 돌 투성이였음에도 고운 모래가 있었다고 증언한다거나 김씨가 등반을 개시한 지점 주위에 주민들은 집과 논밭이 많았다고 증언함에도 주변에 논밭, 집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김씨가 주장한 등산로, 계곡, 하산로가 전혀 주장과 어긋난다는 점 등.
- ④ 유가족들이 사건 직후인 오후3시경 익명의 전화로 사고소식을 들었고, 동아일보에도 비슷한 시각에 연락이 왔

지만, 당시 산 속에는 전화가 없었고 인가도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시각에는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

⑤ 사건에 의문을 품은 동아방송 기자에게 무조건 취재 중단 명령이 떨어진 점과 당시 인근 군부대에서 추가 조사를 하려던 것이 상부의 지시로 저지되었던 점.

⑥ 의문을 제기했던 동아일보 장봉진 기자를 검찰이 연행하고, 편집자인 성낙오 기자를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하고도 긴급조치 사상 처음으로 기소유예 석방한 것은 사건의 원인규명을 차단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 의문이 제기된 점.

⑦ 장남 호권씨에게 사고 직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몸조심하라는 전화가 걸려왔고, 현장의 사실 확인 없이 실족 추락사로 정부가 홍보하였다는 증언이 있는 점.

3. 강제징집, 녹화사업에서 살해된 6인

가. 정성희

1) 배경 : 81년 연세대 인문대 입학하여 학생운동에 투신, 그해 11월 25일 교내시위와 관련 15명의 다른 학생들과 강제 징집됨. 첫 휴가 직후인 82년 7월 23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제○○사단의 소속대 26번 철책 초소에서 총기 자살(군당국 발표). 유서는 없고 "또 백양로를 걸어 보고 싶다.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담하다니. 윤희(정성희)야 네가 배운 지식을 가난하고 병들고 놀린 자들을 위하여 활용하라"는 낙서 쪽지만 발견됨. 이후 경기도 고양시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 강집 사망 제1호.

2) 쟁점들

- ① 사고 당시 목격자라고 하는 조선대 공과대학 전기공학 학과 제2학년 임동구(당시 전방훈련을 들어왔음)씨가 같이 참호에서 근무하였다고 하고, 사망 당시에 총소리가 나서 옆에 가보니 총을 자살하여 죽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목격자는 총소리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함구.
- ② 자살한 사병의 영결식을 매우 근엄하게 치러 준 군 당국과 당시 상관들이 자살로 믿어 달라고 유가족에게 간청을 했던 일들이 오히려 구구심을 자아냄.
- ③ 죽음 직전 휴가에 나와서 학생운동을 하던 동료들과 만나 동료들을 격려하고 돌아가는 등 전혀 자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④ 강제징집자의 경우 휴가 후에는 보안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것이 일례인데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나. 이윤성

1) 배경 ; 81년 성균관대학교 역사철학계열에 입학한 후 2학년 인문과학연구회(씨클) 회장직을 맡아 활동. 82년 11월 3일 가두시위 중 연행되어 경찰조사중 씨클 회장이 밝혀져 11월 7일 강제징집됨. 3대 독자이다 아버지가 고령이었고, 시력이 나빠 군입대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징집됨. 제대 8일을 남겨 놓은 83년 4월 30일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군당국 발표.

2) 쟁점들

① 죽음 직전 군수사기관에 불려가 복한 뼈라의 일종인 안전보장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② 조사를 끝내고 부대로 돌아가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하는데,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 고문 등에 의한 죽음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음.

다. 김두환

1) 배경 ; 80년 고려대 정경계열에 입학하였고, 경제학과를 진급함. 3학년 때 경제학회 회장을 맡았고,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83년 3월 8일 4.19 행사 등을 준비하던 중 성북경찰서에 다른 학생의 문제로 조사할 게 있다는 연락을 받고 연행. "곧 풀어 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고 3월 15일 석방. 3월 16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시간 호텔에서 18일 아침까지 동료와 함께 3명의 형사들과 동숙함. 18일 아침 병무청 직원 1명이 와서 간단히 서류를 작성, 강제징집되어 훈련소 입소. 6월 18일 총기 자살(군당국 발표). 유가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부가 다 없어진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함.

2) 쟁점들

① 평소 활발한 성격이었고, 군훈련소에서도 성적이 우수해 사단장 표창을 받았고, 자대 배치 후에도 특별한 심경의 동요가 없었음이 확인됨.

②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애인이 변심하여 자살했다고 주장하지만, 애인은 변심한 사실이 없음.

③ 고대 학생운동권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녹화사업을 당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군당국의 설명이 없다는 점.

라. 한영현

1) 배경 ; 1981년 한양대 공대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 교내 씨클 민족문화연구부에 가입, 탈연합회(각 대학연합 민족연구회 활동)와 82년 부천에서 선배의 소개로 야학활동 등을 함. 83년 1월 야학 선배가 경찰 조사중 한씨의 이름이 나오자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고 나온 한씨의 손목 등에 철사 줄로 맞은 고문의 자국이 있었음. 조사후 4월 1일 수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나 녹막염으로 병중 판정 받음.

그러나, 4월 2일 경찰서 연락을 받고 나간 후 행방불명. 2-3주 옷이 가족에게 우송되자 강제징집이 확인됨.

이후 83년 7월 1일 두개골이 없는 참혹한 모습으로 사망함.

2) 쟁점들

① 군입대후 훈련소에 입소도 되지 않은 채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의 조사내용과 과정을 밝혀야 함.

② 5월 연행된 동료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영현이가 동물을 토하면서 한 이야기"라면서 한씨의 육성테이프를 들려주었다고 함.

③ 83년 6월 18일 특별휴가(장제징집 학생들을 프락치로 활용하기 위해 군수사기관이 내보내는 휴가) 당시 한씨의 팔에 남아 있었다는 피멍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 과정에 의한 고문으로 보이며, 당시 한씨가 "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며 81학번뿐만 아니라 72학번까지도 여파가 미치는데 아마 커다란 배가 침몰할 것이다"고 말했다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쫓던 사건과 조직의 실체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함.

④ 83년 7월 1일 초소에서 총기로 자살했다는 군당국의 주장에도 의문이 있음.

⑤ 한씨에게 가해졌던 녹화사업의 실체가 총체적으로 파헤쳐져야 함. 가장 극심한 녹화사업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사료됨.

마. 최은순

1) 배경 ; 1981년 동국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입학 후 학생운동에 헌신, 83년 3월 29일 시위에비음모로 5명의 학생과 함께 경찰에 연행, 1주일간 조사를 받은 후 강제징집담함. 83년 8월 14일 군에서 가족에게 '급 위독'이라는 전보가 와 급히 부대에 갔으나 이미 사망. 군당국은 최초에는 자살이라고 했다가 이후 가족들의 항의에 따라 타살로 번복.

2) 쟁점들

① 최초에는 자살로 발표하였다가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자 재수사하여 타살이라고 번복한 점,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다른 의문의 죽음과 같이 자살로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점.

② 군 당국 발표 가해자(고참)의 타살 동기가 사소한 언쟁 끝에 오발에 의한 사고라고 하지만, 고참과 졸병 사이의 갈등에서 고참이 졸병을 죽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진술과 조사내용도 의문임.

③ 최씨의 경우 다른 강제징집자 처럼 보안대에 의한 녹화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바. 한희철

1) 배경 ; 1979년 철도고를 졸업하고 철도청 장학생으로 서울대 공대에 입학, 1982년 12월 1일 군에 입대(강제징집이 아님). 제5사단 본부 부관 참모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83년 10월 14일 정기휴가를 나왔다가 외국어대에서 시위로 수배중이던 김무현씨를 만나 동사무소 근무 중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운동권 학생들의 주민등록 신규 발부를 도와주는 편지를 써 주고 귀대. 김씨가 채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검거됨. 이 일로 인해 보안대에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입대 전 학생운동과 야학연합회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됨. 12월 11일 편지지 3매에 장문의 편지를 써 놓고 가슴에 총탄 세 발을 맞은 상태로 초소에서 주검으로 발견됨.

2) 쟁점들

① 보안대 조사 후 군부대 복귀하여 군 동료에게 "전기 고문을 두 번이나 당했다"고 말한 점과 사체에도 팔목 등이 검게 심하게 부어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보안대 조사 과정

에서 전기고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이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함. 군부대 상급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보안대 조사를 부인했다는 점.

② 보안대 조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집중적으로 무엇을 추궁 받았는지 밝혀져야 함.

③ 가슴에 난 총탄 3발도 의문임. 즉, 단발로 1발씩 쏘는 것은 불가능-1발 발사 때 이미 사망에 이르게 됨-하고, 연발로 쏘 경우 보통 일직선으로 총탄 자국이 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자살이 아닌 타살일 가능성도 있음. 즉, 군보안대에서 고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살로 위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④ 유서가 남아 있고, 필적도 확실하다지만, 당시 녹화사업 과정에서 유서를 써 놓게 한 상태에서 군수사기관이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있고 보면 유서가 있다는 것으로 자살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임.

4. 우종원 서울대생

1) 배경 ; 1981년 서울대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입학, 이후 학생운동에 헌신하였고, 83년 11월 학의 유인물 배포사건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84년 4월 특별가석방 조치로 석방. 84년 9월 복학. 85년 10월 12일 삼민투 사건으로 수배 중 경부선 충북 영동-황간 사이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2) 쟁점들

① 가족들은 우씨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 경찰의 주장을 한결같이 부인하는데, 이미 구속 경험이 있는 우씨가 다시 구속될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며, 열차에서 추락한 것에 비해서는 외상이 없다는 점.

② 경찰당국이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단서인 메모 쪽지에 나타난 필체가 평소 그의 필체와 다르다는 점.

③ 사망 추정 시간을 결정하였던 유일한 근거인 기차표 역시 사건 당시 유실된 상태였고, 상당 기간 비에 방치된 상태(24시간 이상)에서 내린 사망진단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④ 시신에서 가슴과 목 바로 밑 2군데에 멍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사망진단서에는 '두개골 복합 골절로 인한 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

다는 점.

⑤ 자살사건에 대해서 안기부와 군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하였고, 이후에도 집 주변을 계속 감시하였다는 점. 물론, 우씨가 수배중이었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씨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김성수 서울대생

1) 배경 : 1986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 입학, 이후 총학생회 연극부에 가입하여 써클 활동에 열성적이어서 5월 제 연극공연에서 노동자역을 맡기도 함. 시위 참가 이유로 2차례 연행 이후 훈방됨. 1986년 6월 18일 누나와 지취하던 집에서 경상도 말씨를 쓰는 남자의 전화를 받고 교련복으로 갈아입은 후 외출,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가 6월 21일 부산 송도 앞 바다에서 스킨 스쿠버에 의해 발견됨.

2) 쟁점들

① 경찰은 사건 수사를 초기부터 성적 불량에 따른 비관자살로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짜 맞추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김씨의 경우 1학년생으로 대학에서 1학년 1학기 기말시험을 치르는 중이었으므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 또한, 사건 결론에 의문을 가졌던 수사관을 전격 전보시킨 점.

② 경찰은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인 자취방으로 걸려 온 경상도 말씨의 남자를 찾아내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

③ 사체 발견 지역인 부산에는 연고가 없었고, 외출 당시 소지한 5천원 으로는 부산까지 내려가는 차비도 부족하였다는 점. 따라서, 부산까지 오게 된 경위가 밝혀져야 함.

④ 사체 발견시 몸에 시멘트 덩어리를 달고 있는 상태였으며, 사체 발견 장소는 방파제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시멘트 덩어리를 매단 채로 수영을 할 수는 없다는 점. 더구나 신발과 외출시 입고 있던 교련복이 아닌 카키색 군복 비슷한 상하의를 입고 있던 점으로 미뤄 보아서 도저히 혼자서 자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경찰 수사발표대로라면 옷과 신발을 신은 채로 시멘트 덩어리를 들고 수영을 하고 사건 지점에 도달해 자신의 몸에 물에 뜬 상태에서 시멘트 덩어리를 매달았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

⑤ 사체부검이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이뤄졌으며, 당시 사체 부검에 참관했던 부산일보 장병호 기자에 따르면, 세로 5cm, 가로 상부 3cm, 하부 1cm가량의 상처가 머리에 나 있었으며, 이런 상처는 매우 정교한 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에 따라 외부에서 사망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바다에 가라앉힌 것으로 보임.

6. 이내창 중앙대 총학생회장

1) 배경 : 군 제대 후 1986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에 입학. 학생운동에 투신 3학년 때 조소학과 학회장을 지냈으며, 1989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에 선출되었고, 1989년 8월 15일 여수 앞 바다 거문도에서 사체로 발견됨.

2) 쟁점들

① 총학생회장으로 매우 바쁜 약속 일정과 행사일정-8.15 행사-을 앞두고 학교에 찾아온 도연주(안기부 인천지부 소속), 백승희와 함께 여수로 내려가 거문도 앞 바다에까지 가게 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평소 이씨는 약속시간 5분도 넘기지 않는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들 2인과 함께 거문도까지 동행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점.

② 안기부 인천지부(세창 인하공사) 소속 도연주씨가 끝까지 동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런 사실이 목격자들에 의해 입증된 점. 안기부 직원이 무슨 이유로 이씨를 유인하였는지에 대해 밝혀져야 함. 또한, 도씨 등의 주장과 목격자들 간의 증언을 대조해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은 도씨가 의도적으로 행적을 숨기려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점.

③ 바다에서 실족 익사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발표인바, 15일 거문리와 덕촌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3시간 뒤에 바다에서 옷뭉치 벗겨진 상태에서 바다에 얹어진 채로 발견되는데, 그 3시간 동안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

④ 서도 유림해수욕장 방갈로 앞으로부터 약 5백m 떨어진 암석지대에서 이씨가 실족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익사 후 조류에 떠밀려 5백m 쯤 흘러왔다고 하였으나, 주

민들은 물에 떠밀려 온 사체치고는 외상이 너무 없으며, 암석지대로부터 방갈로 앞 바닷가 사이에는 암초 등 바윗돌이 많고, 당시는 여름이어서 오후 6시경에는 날이 환해 밀려오는 사체를 사람들이 목격하지 않을 없다고 증언하는 점. 또한, 사체 발견 현장에서 3m 떨어진 곳에 이씨의 허리띠가 놓여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보아 사체가 조류에 의해 떠밀려 올 경우는 불가능함. 경찰의 실족익사 추정지점인 암석지대에 가려면 해안을 따라 바윗돌들을 건너뛰거나 타고 넘는 방식으로 이동하거나, 뒤편 오솔길을 따라 가다가 동백나무 등 잡목 숲을 뚫고 들어가야 하나 이 두 가지의 경우와 외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경찰의 추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

⑤ 당시 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축전에 민족민술진영에서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을 보낸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특히 안기부-의 촉각이 예민했고, 또한 보안사(현 기무사) 생매장 사건을 당했던 김정환(국민대생)씨가 중앙대에 은신 중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들 사건과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7. 박창수 한진노조 위원장

1) 배경 : 1979년 부산기계공고 졸업 후 진양기계 등을 거쳐 1981년 5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배관공으로 입사. 1987년부터 노조 활동 시작하여 3년간 노조 회계감사를 역임하였고, 90년 7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어 전국노동조합협의회(현 민주노총) 산하 부산지역 노동조합총연합 부의장 역임. 91년 2월 11일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 대기업노조 대표자들과 이를 논의하던 중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제3차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됨. 5월 4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마에 상처를 입고 안양 병원으로 입원. 5월 6일 새벽 4시 45분경 병원 마당에서 의문의 사체로 발견됨.

2) 쟁점들

① 안기부 요원 홍상태(안기부 부산지부 사하구 담당 조정관)가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면서 박창수 위원장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해 왔고, 그는 구치소에서 협박을 일삼았고, 특히 시신탈취로 유가족들이 병원 6층에 감금되어 있던 상황에서도 그가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

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안기부에 의해 매수된 것으로 보이는 장세군 당시 한진노조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찾으려 하지 않았던 점.

③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경찰은 조문객 25명을 구속하고, 7명을 수배하고, 수십명의 부상자를 내면서 영안실벽을 뚫고 쳐들어와 시신을 탈취하여 서둘러 부검을 실시,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④ 사인에 대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의 의무기록 일지와 구치소 접견대장, 재소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⑤ 병실 문에는 교도관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박씨가 밖으로 나간 것을 목격하지 못한 점.

⑥ 경찰이 솔선하여 현장을 파괴하고 시신상태를 변조한 점 등으로 미뤄 보아 부산지역의 가장 강력한 민주노조인 한진노조를 깨기 위해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사인이 은폐된 것으로 보임.

4)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

● 고정희(29세) 88.5.13 (치안본부, 대공분실)

연세대생으로 민족통일애국청년단 중앙본부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다 서초서 대공과에 연행 당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뒤 강남 성모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김두형(24세) 83.6.18 (보안사, 기무사)

고대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성복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강제징집된 뒤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김성수((19세) 86.6.21 (치안본부, 대공분실)

서울대 학생으로 총학생회 연극부에서 활동하다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뒤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시멘트 덩어리에 매달려 있는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김영환(27세) 91.4.27 (보안사, 기무사)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한미군사관계, 평화, 군축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을 연구하

던 그는 강경대 학생이 운명한 다음날 자취방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김용갑 90.3.28 (기업주, 재단)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자주화 투쟁을 전개하던 중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학교측으로부터 공공연한 협박과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위장한 타살로 추정된다.

● 김용권(24세) 87.2.20 (보안사, 기무사)

서울대생으로 카투사에 입대 후 보안부대로 호출된 뒤 프락치 행위를 강요받고 구타당한 뒤부터 정신불안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남현진(22세) 91.2.3 (보안사, 기무사)

한국의국어대생으로 학생회 간부로 활동 중 군 입대. 상관이 "통일이 되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미제국주의다."라는 대답을 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노철승(23세) 87.3.1 (보안사, 기무사)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수도방위사에 근무하다 당시 복역 중이던 형과 편지를 주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문영수(30세) 82.8.19 (경찰)

진안교통 노동자로 광주 서부서로 연행되어 경찰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뒤 행려병자로 위장되어 사체는 전남대의대에서 해부 실습용으로 이용 되었다.

● 문용섭 88.6.9 (기업주, 재단)

광무택시 노동자로 족벌체제로 운영되던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휴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회사근처의 포장마차에서 회사간부와 깡패들과의 말다툼 끝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문승필 92.11.3 (치안본부, 대공분실)

전남대 학생으로 미문화원 시위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뒤 92년 대선을 앞두고 경찰의 수배를 받던 중 철로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박상구(21세) 87.5.11 (군대)

군복무 중 평소 군의 비리와 비인간적인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어 상관의 미움을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박성은(22세) 90.5.24 (보안사, 기무사)

방위병으로 근무 중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구타사건과 군부대 내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

을 작성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대 내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박종근(26세) 88.8.1 (군대)

동국대 경주분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근무 중 녹용이 든 보약을 상납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박창수(34세) 91.5.6 (중앙정보부, 안기부)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대우조선의 파업관계로 긴급 소집된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했다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안기부로부터 전노협 탈퇴를 강요받던 중 안양병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박필호(22세) 87.3.19 (군대)

부산대 의대생으로 육군에 입대 후 화장실에서 목이 매인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배중손 88.11.14 (기업주, 재단)

87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회사측의 휴업조치이후 어용 노조의 민주화와 임금인상 투쟁에서 앞장서 싸워오던 중 회사측의 문책과 감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송중호(24세) 91.2.20 (보안사, 기무사)

서울대생으로 학생회에서 활동하다 군에 입대한 뒤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이동상황실 안에서 벽면 합판에 목이 매인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신호수(24세) 86.6.19 (치안본부, 대공분실)

방위병 시절에 복한 뼈대를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되어 도피 중 인천의 도화가스에 근무하던 그는 서울 서부서 형사들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 되었다 고향 근처인 여천 대미산 동굴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오범근 88.3.10 (기업주, 재단)

프레스공으로 작업중 네 손가락이 잘려 수위로 근무하던 중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에 적극적으로 지지표명을 해왔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불려간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우인수 88.6.24 (군대)

성관대생으로 군에 입대하여 포병연대에 근무 중 외박을 끝내고 귀대한 직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우종원(28세) 86.10.11 (치안본부, 대공분실)

85년 서울대 운동권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그는 민주위 관련으로 수배를 받아오다 경부선 철로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이내창(28세) 89.8.15 (중앙정보부, 안기부)

중앙대 안성교정 총학생회장으로 활동 중 8.15민족해방일 기념식을 앞둔 8월 14일 오전에 학교로 찾아온 안기부 인천 분실 직원 도연주 등과 나간 뒤 남해안 절해고도 거문도 앞 바다에서 15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이덕인(29세) 95.11.28 (경찰, 철거용역)

4급 장애인으로 아암도 바닷가에서 노점을 하던 중 인천시에서 경찰병력과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자 골리앗에 올라가 저항하다 실종된 뒤 아암도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이승삼(22세) 87.3.3 (군대)

부산대생으로 36사단에 입대 후 가족과 면회하고 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부대에서 고참들의 심한 구타로 실신 까지 하게 되자 구타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운성(20세) 83.4.30 (보안사, 기무사)

성관대생으로 인문과학 연구회 회장직을 맡기도 한 그는 가두시위에서 연행된 뒤 강제징집되어 당시 군 강제징집자에 대한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 이이동(22세) 87.6.15 (군대)

전남대 학생으로 입대 후 6월항쟁이 진행되던 당시 충청교육을 받을 때 그가 학생시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심한구타를 당해 실신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이재호(25세) 89.10.29 (기업주, 재단)

인천 협신사 노동자로 회사측의 갖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 재건과 관련하여 주안 노동사목에서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둔기에 턱을 맞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이철규(25세) 89.5.10 (치안본부, 대공분실)

조선대생으로 조선대 교지인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명수배된 뒤 광주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이태춘(28세) 87.6.24 (경찰)

태광고무 노동자로 18일 부산 좌천동 시위때 온몸에 최루탄을 뒤집어 쓴 채 육교밑에서 발견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 임기운(59세) 80.7.26 (보안사, 기무사)

75년 결성된 '사회정의구현 부산 기독인회'의 회장을 지냈던 그는 국군 보안사령부 부산분실(속칭 삼일공사)에 연행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장준하(58세) 75.8.17 (중앙정보부, 안기부)

오랜 민주화투쟁과 통일운동으로 재야 대통령이라는 칭송까지 들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는 유신헌법 철폐를 목적으로한 개헌운동을 벌이다가 포천의 약사봉 밑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정경식(29세) 87.6.8 (기업주, 재단)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로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 노조지부장 선거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정범영 78.7.8 (치안본부, 대공분실)

청주신학대생으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신홍제분, 조광희 노동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4개월간의 단식투쟁으로 경찰의 집중표적이 된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정성희(21세) 82.7.23 (보안사, 기무사)

연세대 학생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시위 과정에서 연행되어 강제징집된 뒤 철책초소 야간 근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정연관(22세) 87.12.4 (군대)

군입대후 대통령선거 군부재자 투표를 한 뒤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집단구타 당하여 운명하였다.

● 최은순 83.8.14 (보안사, 기무사)

동국대생으로 시위에비음모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뒤 강제징집되어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최우혁(22세) 87.9.8 (보안사, 기무사)

서울대 학생으로 학생운동에 헌신하여 수차례의 구류를 살기도 했던 그는 군복무 중 사회과학적학을 읽다 보안대에 적발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최종길(42세) 73.10.19 (중앙정보부, 안기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한영현(22세) 83.7.2 (보안사, 기무사)

한양대 학생으로 부천의 야학활동을 한 선배의 조사과정 중 그의 이름이 나와 조사를 받고 강제징집된 직후 보안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한희철(23세) 83.12.11 (보안사, 기무사)

군입대 후 시위주동자로 수배중인 친구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 주었는데 이후 편지가 들통나고 보안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허원근(23세) 83.4.2 (군대)

부산수산대생으로 군 복무 중 유류고 뒤에서 세 발의 총을 맞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다음 날이 첫 휴가였으며 한꺼번에 세발을 쏘아 자살을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타살임이 확실시 된다.

IV. 대국민 캠페인 일정과 방식

이 투쟁의 목표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열사들을 죽음으로 이르게한 악법 개폐와 폭압기구의 해체 등을 이루어내는 투쟁과 더불어 각종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비롯한 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을 포함하는 가치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하여 이에따라 민관 합동 특위의 성격을 띤 기구를 발족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이후에는 범국민 감시단을 구성하여 과거 청산이 올바른 원칙하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1) 1단계 투쟁 : 4월 24일부터 5월 말

(오후 4:00부터 6:00, 서울역 앞)

- 매주 금요일을 고난일(열사 희생자의 날)로 정하고 집회 형식의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함. (집중 투쟁)
- 다른 요일은 회원 단체와 각 학교 총학이 돌아가며 유가협과 결합하여 캠페인 전개.
- 내용 : 문선대 공연, 홍보물 배포, 서명 작업, (열사 대자보)와 의문의 죽음 사진전, 엽서 보내기 운동

1) 열사 대자보는 요일별로 전시

- 예 : 월(노동열사1), 화(노동열사2), 수(학생열사1), 목(학생열사2), 금(의문의 죽음), 토(재야열사)

2) 소규모 공연

3) 홍보물 배포

4) 의문의 죽음 사진전

5) 진행 (매주 금요일, 열사 희생자의 날)

- 연설 / 사례발표 / 공연 / 거리 서명 조직

2) 2단계 투쟁 : 6월부터

- 매주 금요일(열사 희생자의 날)마다 대국민캠페인 전개

3) 3단계 투쟁

- 정기국회 때부터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때까지 농성 투쟁 돌입